

# 당원 행사에 경비정·행정선 동원 물의

## 강기정 의원 시당위원장 선거 앞두고 '부적절 행동' 눈총

### 강의원 "고령자 많고 안전상 문제, 정상절차 따랐다"

민주당 강기정(광주 북갑) 의원과 당원 80여명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아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 하의도를 가려고 해경 경비정과 군청 행정선을 동원해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선거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편의를 위해 해상경비와 치안을 담당해야 할 해경 경비정과 행정선까지 동원한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골치아픈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이다.

22일 신안군과 목포해경 등에 따르면 21일 오전 10시 55분께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강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북 갑 지역위원회 소속 지방의원과 각 지역위원회 대표 및 당원 80여명이 목포항 광공선 부두에서 목포해경 소속 경비정 1척과 신안군청 소속 행정선 1척을 이용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하의도로 출항했다.

이들은 이날 하의도 김 전 대통령 생가에서 추모행사를 갖고 김 전 대통령이 마지막 고향 방문 때 들렀던 덕봉강당과 하의도 큰 바위 얼굴 등을 둘러봤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강 의원 측에서 애초 경비정 2척을 요구했지만, 해상치안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국회 의원 예우차원에서 1척만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동원한 것이 아니다"면서 "애초 신안군의 행정선만을 이용하려 했지만, 당일 행사 참여 인원과 고령 참가자가 많아 안전상 문제 등이 우려돼 해경에도 경비정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협조공문 등을 통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배를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정부는 김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추모 열기를 감안해 더욱 많은 국민이 김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추모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강 의원 측은 신안군 등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문의했고, 정 같은 날 1박2일 일정으로 하의도에서 진행된 사단법인 '행동하는 양심'의 '창년 김대중 캠프'의 경우는 자비로 당대회를 앞둔 시점에 당원 동원 행사를 벌인 것과 당원 편의를 위해 행정선과 대간척 작전을 펴는 해경 경비정까지 동원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강 의원이 당원행사에 치안유지에 투입돼야 할 경비정 등을 동원한 것은 부적절했다

는 비판 댓글이 수백 건 올랐다.

특히 목포와 신안 하의도를 오가는 정기노선이 하루 4차례씩 있는 데다 같은 날 1박2일 일정으로 하의도에서 진행된 사단법인 '행동하는 양심'의 '창년 김대중 캠프'의 경우는 자비로 행사를 치른 점과 대조를 보여 더욱 비난이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행정선과 해경 경비정을 자신의 지역구 당원행사에 이용하고도 어색한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출마 하겠다” 민주당 정세균 전 대표가 22일 여의도 민주당 아래 한 카페에서 “당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며 10·3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당원 절반 '집단지도체제' 찬성

## 차기 지도부 체제 관련 여론조사 ... 당권과 '단일성' 제동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체제와 관련, 민주당 당원들은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주당 당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일성 지도체제 유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2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당원·당구 분과위원회가 지난 주 일반 당원(1173명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여론조사 결과, 전체의 54.7%가 집단지도체제 도입에 찬성한 반면, 단일성 지도체제에 찬성하는 당원은 30.2%에 그쳤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차기 또한, 일반 대의원(3천150명 응답)

에 대한 ARS 여론조사 결과, 집단지도체제 찬성이 50.5%, 단일지도체제 찬성은 43.9%로 나타났다.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130명)에 대한 e-메일 여론조사에서는 단일지도체제 찬성이 49.2%, 집단지도체제는 50%로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127명)에 대한 e-메일 여론조사 결과는 단일 지도체제 찬성이 70.2%, 집단지도체제 찬성이 28.3%로 집계돼 일반 당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정반대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차기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e-메일로 여론조사를 하면 누가 솔직하게 입장을 밝힐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이는 단일 지도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당권과의 골수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도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과 일반 당원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은 대의원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현행 방식을 가장 선호했고 이어 국민여론조사 일부 반영, 전당원에게 투표권 부여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당원들은 국민여론조사 일부 반영 방식에 50% 넘는 지지율을 보이며 대비를 이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 당권주자 노선투쟁 점화

## 정세균·손학규 "생활정치" 정동영 "담대한 진보"

민주당 당권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노선 대결도 본격화하고 있다.

"진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교집합이 형성돼 있지만 저마다 내세운 구체적 색깔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치열한 노선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우선 정세균, 손학규 전 대표와 김홍석 의원은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가운데 '생활정치' 쪽에 방점을

뒀다.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탈피,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냐를 기준으로 노선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다. 진보라는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을 '잘 먹고 살게 해주는 정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박주선 의원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중도개혁' 계승을 내세운 '혁신중도'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는 "진

대한 분이 있는가. FTA를 찬성하는 진보주의자가 세상에 어디 있나"며 진보논쟁에 일격을 가했다.

반면 현 주자들을 가운대 '담대한 진보'를 꺼내들며 당 정세균 경쟁에 불을 붙인 정동영 상임고문과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한 천정배 의원이 상대적으로 가장 '왼쪽'에서 있다. 정 고문은 22일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을 실행할 화두로 '사회복지 부유세'(가칭 복지세) 신설을 제시했다.

/박지경기자 jpk@k

# 광주 서구청장 보선 노린 후보 자천타천 20여명 거론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전주진 광주 서구청장이 23일 사퇴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10월 27일 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전 청장의 사퇴가 일찌감치 예상되면서 물밑 선거전이 이미 시작된다. 보궐선거 전에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만 20명 가까이 이르고 있어 과열양상마저 우려되고 있다.

현재 민선 서구청장 출신 이정일·

김종식 전 청장, 임우진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김법남 전 광주시 비서실장, 정남준 전 행사부 차관 등 행정관료 출신들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 청장에게 고배를 마신 김선욱 전 후보를 비롯한 송갑석 전 전대회 의장, 송선태 전 광주시의회 전문위원, 김성숙·조광항 전 광주시의원, 고재정 전 민주당 광주시지부 부지부장, 서재의 광주시 생활체육배구협회장, 김성현 전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처장 등 10여 명이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기에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 야 4당과 시민사회진영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강기수 민주노동당, 서대석 국민참여당 전 서구청장 후보와 이상갑 변호사 등이 꼽히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등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 진영에서는 지난 7·28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처럼 단일후보를 내세워 민주당과 한번 '일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궐선거 특성상 전라공천이 점쳐지기 때문에 10월3일 전당대회를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경선이 돌입하면 서구청장 후보자들의 특정 후보 지지 등 줄서기도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내년 의정비도 동결 구례군의회...3년 연속

구례군의회(의장 서은식)가 내년도 의정비를 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구례군의회는 지난 20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갖고 2011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연 2976만원)에서 동결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3년 연속 동결한 것이다.

서 의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집행부의 재정적 고충을 생각해 의정비를 동결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정기 라운지**

**장성민 전 의원 "섬김·변혁 정치"를**      **장휘국 "수능개편안 사교육 부채질"**

민주당 최고위원 도전을 준비 중인 장성민 전 의원은 "민주당을 살리고 2012년 정권교체를 이루려면 소통을 통한 섬김과 변혁의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은 22일 광주·전남지역 당원들과 대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6·2 지방선거와 7·28 재보궐선거를 치른 당원들과 대의원들을 만나본 결과, 당의 주인인 당원을 섬기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모시는 소통의 섬김 정치를 펼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정권교체의 비전에 생명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뉴리더가 되겠다"고 말했다.

고흥 출신으로 국민의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 전 의원은 "민주당은 21세기 세계사적 변화, 시대정신, 국민요구에 맞게 혁신적인 변화 즉 변혁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는 22일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수능개편안에 대해 "내신 중심 학생선발 및 수능 등급제 등 대입제도개선이 아닌 수능제도만을 개편한 것은 '교육의 백년대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능시험 2회 실시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기회를 더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수능시험 2회를 모두 치를 가능성이 커 학생 부담감과 사교육 부채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 정부의 수능제도도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 탓에 학생들의 부담과 사교육비가 치솟고 있다"면서 "앞만 보려는 점수제 방식의 수능제도 개선이 아닌 멀리 보는 내신중심(등급제 방식)의 대입제도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수강생 모집**

**스피치 리더십 과정**

**교육내용**

- 1. 스피치 기본이론
- 2. 스피치 자세
- 3. 스피치 발음
- 4. 스피치 호흡
- 5. 스피치 억양
- 6. 스피치 리듬
- 7. 스피치 속도
- 8. 스피치 강세
- 9. 스피치 정지
- 10. 스피치 휴지
- 11. 스피치 침묵
- 12. 스피치 표정
- 13. 스피치 제스처
- 14. 스피치 의상
- 15. 스피치 악세서리
- 16. 스피치 소품
- 17. 스피치 배경음악
- 18. 스피치 조명
- 19. 스피치 소품
- 20. 스피치 소품

**교육목표**

- 1. 스피치 기본이론
- 2. 스피치 자세
- 3. 스피치 발음
- 4. 스피치 호흡
- 5. 스피치 억양
- 6. 스피치 리듬
- 7. 스피치 속도
- 8. 스피치 강세
- 9. 스피치 정지
- 10. 스피치 휴지
- 11. 스피치 침묵
- 12. 스피치 표정
- 13. 스피치 제스처
- 14. 스피치 의상
- 15. 스피치 악세서리
- 16. 스피치 소품
- 17. 스피치 배경음악
- 18. 스피치 조명
- 19. 스피치 소품
- 20. 스피치 소품

**문의: 064-744-1109** (주)제주무궁화관광